



#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·사보험 협력

변혜원 연구위원

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, 특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.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, 공·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대응, 특히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음. 따라서 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서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, 데이터분석,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·사 협력이 필요함

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,134억 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함<sup>1)</sup>

-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유형을 크게 허위·과다사고, 고의사고, 피해과장(자동차)로 분류하고 있는데, 이중 허위·과다사고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
- 보험종목별로는 적발금액 기준으로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0.3%,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9.7%를 차지함(2019년 상반기)
  -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,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모두 보장성보험과 관련된 건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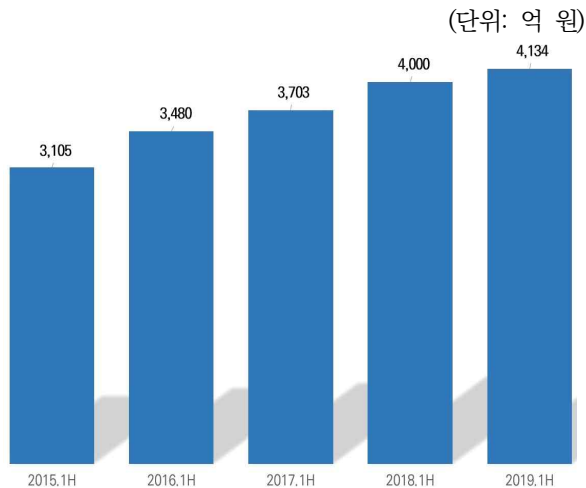
■ 주목할 점은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

- 2015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.34% 증가했으며, 연평균 증가율(CAGR)<sup>2)</sup>은 8.45%였음
-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.13% 증가했고, 연평균 증가율은 4.91%였음

1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9. 11. 1), “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,134억 원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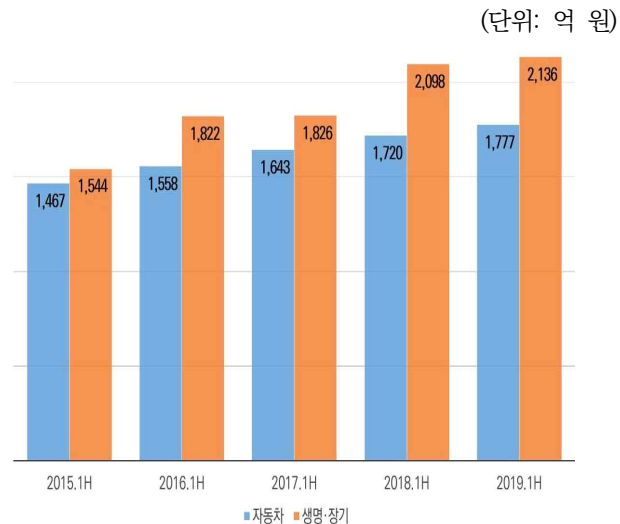
2) Compound Annual Growth Rate

〈그림 1〉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2〉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(자동차, 생명·장기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■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는 손해를 증기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,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

-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는 대부분이 의료 관련 사기로서 동일 건에서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청구<sup>3)</sup>가 함께 발생하거나,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영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부담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음
  - 자동차보험 관련 대인보상 부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므로, 국민건강보험 부담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움
- 문제의료기관은 허위 진단서 발급, 입·퇴원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청구하고, 허위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
- 입원기간을 조작하거나 진단명이나 수술기록을 조작하는 문제의료기관은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청구에 모두 연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

■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담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, 보험사기 및 부담청구에 대한 공·사 협력 대응,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

- 민영보험 부문에서는 2019년 7월에 장기보험 관련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동 대응 TF가 구성되었으며,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보험사기건 적발 및 자료분석을 지원하였음

3) 부담청구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,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. 의료급여법 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, 의료급여법 제28조(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), 의료급여법 제29조(과징금 등)

-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, 불법개선 의료기관 예측·감지시스템 고도화,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음<sup>4)</sup>
- 한편 2009년에는 「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」이 구성되어 공·사 협력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,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- 동 대책반은 검찰청, 경찰청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여 서울중앙지검 내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됨
  - 2017년 말 9개 기관 파견자를 복귀시키고,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4부에서 단독 운영되다가 2019년 3월에 대검찰청 형사부로 이관되면서 상설기구가 됨
-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공·사 간 데이터 공유 문제였음

#### ■ 의료사기(Healthcare Fraud) 방지를 위한 공·사 협조 체계 사례로서 미국의 HFPP(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)를 참고할 만함

- HFPP는 연방정부, 주정부, 법집행기관, 민영 건강보험회사, 의료사기 방지단체 간의 공·사 협조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됨
  - 협력 연방정부기관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정청(CMS)<sup>5)</sup>, 급여조사국(OIG)<sup>6)</sup>, 노동부 연방산재보험<sup>7)</sup>, 국방부 건강국(DHA)<sup>8)</sup>,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이 포함됨
  - 협의체는 이사회, 데이터 교환, 분석결과와 운영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데이터분석·검토위원회(DARC)<sup>9)</sup>, 종합적 분석결과와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담당하는 정보공유위원회(ISC)<sup>10)</sup>로 구성됨
- 동 협의체는 의료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공·사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,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,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위한 포럼 제공을 목적으로 함
  - 미국 보건의료재정청과 계약을 맺은 제3신뢰기관(TTP: Trusted Third Party)이 안전한 데이터 관리 분석환경, 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, 데이터분석 운영을 담당함
- HFPP는 오피오이드(Opioids)<sup>11)</sup> 남용 및 사용장애, 임상실험서비스(Clinical Laboratory Services) 분야의 의료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, 정보공유, 관련 대응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였음

#### ■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서는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, 데이터분석,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·사 협력이 시급함

4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8. 7. 18), “‘사무장 병원’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!”

5) CMS: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

6) OIG: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

7) Federal Employees' Compensation

8) DHA: Defense Health Agency

9) DARC: Data Analysis and Review Committee

10) ISC: Information Sharing Committee

11) 아편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·마취제

- 보험사기 건은 개별 건만을 검토할 때는 적발이 불가능하나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,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으므로,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함
- 아울러 한 권역에서의 보험사기 적발은 연루된 사기범을 검거함으로써 다른 권역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음
-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·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임
- 장기적으로는 정부, 소비자, 보험회사,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[kiri](#)